

제 VII 장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1. 서론

- 인구구조 고령화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영향은 노동력 구성에 있어 청년층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한다는 것임.
 - 이에 따라 청년층 인력이 부족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음.
 - 유럽에서는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과 더불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청년층 인력부족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고령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에서는 고령층 고용문제보다는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경향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가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음.
 - 물론 조기은퇴는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조기은퇴 경향은 시행착오의 산물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 고용문제가 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연금제도의 영향은 커질 것이며, 고령층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음.
-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고령사회에서도 여전히 노동시장은 인구구조보다도 노동시장제도, 경제성장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임.
 - 인구구조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는 않겠지만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요인들을 압도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을 것임.
 - 고령사회에서도 여전히 노동시장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용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최선의 정책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labor market flexibility)임.
 - 그러므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여전히 기본적인 전제임.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동시장 정책 연구는 주로 고령층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있음.
 - 특히 고령층 노동시장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시장은 제도적 여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임(OECD[1996]).
 - 그러한 제도로는 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 및 복지제도, 정년제, 고용계약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므로 정책변수에 속함.
 - 특히 이러한 제도들은 고령층의 근로로부터 은퇴로의 이행과정(transition from work to retirement)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령층의 은퇴과정은 고령층 노동시장 연구에 있어 핵심적인 연구주제가 됨.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까지는 남자의 은퇴연령은 65세 이상이었음. 여기에서 은퇴연령이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는 연령임.
 - 그러나 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은퇴연령이 하락하는 소위 '조기은퇴(early retirement)'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OECD 국가들 중 약 1/4에서는 은퇴연령이 60세 이하로 하락하였음.
 - 예를 들어, 프랑스의 남자은퇴연령은 1950년 66.1세, 1960년 64.5세였으나 1980년 61.3세, 1990년에는 59.6세로 하락하였음(Blondal and Scarpetta[1999]).
 - 조기은퇴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더불어 연금재정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게 되었음. 선진국들의 조기은퇴경향에 대한 연구들은 그 주된 요인으로 연금제도를 지적하였음.
 - 연구결과들에 대한 좋은 서베이로는 Gruber and Wise(1997)가 있음. 연금 외에 실업연금과 장애연금을 연금수급시기 이전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조기은퇴를 유발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지적되었음.
 - 가장 명백한 증거는 은퇴시기가 연금수급자격을 갖추는 연령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금수급 연령은 불가피하게 상향조정되었음.
 -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는 1983년 공적연금 표준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일본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1994)하였고, 독일에서도 1992년 은퇴연기에 대한 보상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완전한 연금혜택을 위한 기여기간을 37.5년에서 40년으로 상

향조정(1993년)하였음.

-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령층 은퇴과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연구주제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음.
 - 그 주제들을 열거하기에 앞서 우선 은퇴의 정의부터 간단히 설명한다면 일반적으로 은퇴는 연구목적이나 자료상의 제약에 따라 다소 탄력적으로 정의됨.
 -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시기나 생애의 주된 직장(career job)을 그만두는 시기를 은퇴시점으로 보기도 하며, 혹은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하는 시기를 은퇴시점으로 보기도 함.
 - 따라서 연구에 따라 그 정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첫째는 정년제와 연령차별금지제도 등 고령층 고용보장제도의 은퇴에 관한 영향임.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으로서 정년연령의 연장은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를 실행함. 일본의 경우, 1998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으로 60세 정년 의무화를 법제화하였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60세 정년이 준수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정년의 65세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 정년제뿐만 아니라 연령차별금지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한 주제임.
 - 연령차별금지제도는 미국에서는 1967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EU에서는 2006년까지 모든 회원국가에서 연령차별금지 법안을 제정하도록 하여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정년연령의 연장이 필요하며 효과가 있을 것인지, 정년의 연장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화 등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장지연(2003)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년제가 정년연령까지의 고용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음.
 - 고용보험 DB에 의하면 2001년 하반기 50대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정년퇴직이었던 경우는 2.9%에 불과하였다는 것임.
 - 고령근로자들의 정년제에 대한 인식은 '정년제는 고령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년제의 존속을 선호함.
 - 반면 OECD(2002)는 우리나라의 정년제도를 비교적 강한 고용보호법제하에

서 현실적으로 연령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해석하고 있음.

- 또한 연령차별금지제도가 고용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지 이를 도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 두 번째의 이슈는 고령층의 생활에 관한 문제임.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 지원이 필요한 고령층도 증가할 것임.

- 고령층의 경제 활동은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은퇴’시부터 연금수급 개시 이전까지는 연금제도의 원래의 목적인 은퇴 후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연금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의 정상수급개시연령은 60세이나 현재의 정부안에 의하면 2013년부터 매 5년당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음.
- 이 경우 고령층의 생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연금수급연령의 상향조정에 따라 그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다른 조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점은 중요한 이슈임. 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서도 기초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여부는 이데 대한 수요를 결정하는 고령층의 생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함.

□ 세 번째의 이슈는 연금제도의 근로유인에 대한 효과임. 선진국들에서 고령층 노동시장의 가장 큰 연구과제는 조기은퇴경향을 어떻게 멈추게 하거나 혹은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임.

- 이러한 조기은퇴경향에는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복지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점이 알려져 있음(Gruber and Wise[1997], Blondal and Scarpetta[1999]).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역시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화에 따라 조기은퇴경향이 등장하여 국민연금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됨.
- OECD(2002)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급의 스케줄로 보아 국민연금이 조기은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였으며 연금제도가 일찍 정착된 선진국들에서는 고령층 노동시장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며 심층적

이며, 뿐만 아니라 고령층 노동시장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됨에 따라 고령층 경제활동의 분석을 위한 패널자료 등 통계자료도 잘 구비되어 있음.

-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고령층 노동시장 각국 고유의 제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임.
-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기업연금의 조기은퇴유인효과가 오히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보장 중에서는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의 은퇴유인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함.
- 반면 유럽에서는 연금의 조기수급자격부여, 실업보험을 매개로 한 조기은퇴경로 등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고령층의 생활과 생계에 대한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 일본의 75세 이상 고령층의 생계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임 (Yashiro and Oshio[1999]).

□ 고령층 노동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며 연구의 축적도 부족한 상황임.

- 현재는 정년제도, 연금제도, 고령의 생활 등 정책효과분석에 미치지 못하고 은퇴로의 이행과정 등 현실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분석단계에 있으며 고령층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통계, 조사통계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있음.
- 따라서 본장에서는 장기적인 고용전망과 고령층의 은퇴양상의 파악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하였음.

2. 노동력의 고령화

- 본 절에서는 기존의 고용전망을 2050년까지 연장하여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장기추계를 실시함.
 - 노동의 공급과 수요조건이 수십 년 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기추계가 필요한 이유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대략적으로나마 평가해보는 데에 있음.

- 고용의 장기전망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정한 가정을 세우고 그에 의거 하여 추계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가정으로는 현재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혹은 취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가정이 있음.
 - OECD(2002)는 2050년까지의 노동력을 장기 전망하였는데, 그 기준가정(중위가정)은 2000년의 경제활동참가율(5세 연령계층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며, 그 외 고위와 저위 가정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국가 중 높은 국가의 수준과 낮은 국가의 수준에 각각 수렴한다는 가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제와는 큰 괴리를 가져올 수 있음.
 - 첫째, 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고령층의 인구비중이 너무 커진다는 것임. 예를 들어, 15세 이상 인구 중 75세 이상의 비중은 2000년의 2.9%에서 2050년에는 22.0%로 확대됨. 따라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노동력 규모를 과장할 수 있음.
 - 둘째, 현재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중 농가인구의 비율이 높음. 그러나 농가인구 중 중장년층의 비율은 매우 낮아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는 농가인구의 비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임.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함.
 -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력에 대한 장기전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는 학력구성의 변화임.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과 청장년층 간의 학력구성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학력구성의 변화폭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학력구성의 변화를 무시한 전망은 실제와는 큰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여기에서 제시하는 취업자 수 장기추계는 한진희·최경수·김동석·임경복(2002)의 결과를 토대로 한 것임.

- 위의 연구에서는 2012년까지의 잠재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한 단계로서 노동공급이 전망되었음.
- 실제의 연구과정에서는 2017년까지의 노동전망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토대로 2017년 이후에는 연령대별 노동공급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장기추계를 도출하였음.

□ 위의 연구는 취업자 수를 노동공급 전망의 대상으로 하였음.

- 일반적으로는 노동공급 전망은 경제활동인구를 전망의 대상으로 삼는데, 경제활동인구 대신 취업자 수를 전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잠재성장률의 계산에 필요한 노동공급은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취업자 수입.
 - 둘째, 일반적으로 먼 장래의 실업률은 예측할 수 없으므로 3% 등 일정한 수준을 가정하는데, 이 경우 취업자 수 전망과 경제활동인구 전망은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같기 때문임. 일부 문헌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노동공급 전망, 취업자 수 전망을 노동수요 전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자 수는 노동공급과 수요 모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실업이 노동의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아닌 구직활동(job search)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상 노동공급과 수요의 전망을 분리하여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전망의 방법은 BLS의 전망방법을 참고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연령계층은 5세 연령계층을 기본으로 하고 15~24세 계층과 60~64세 계층은 4개의 계층으로 세분하였음. 구체적으로 15~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60~61세, 62~64세로 세분하였음.
- 청년층과 60~64세 계층을 세분하는 이유는 취학과 은퇴로 인하여 이 연령계층에서는 세부연령별로 취업상태에 차이가 크기 때문임.
- 고령층은 75~79세 연령계층을 최고령 연령계층으로 하고 80세 이상의 취업률은 0으로 하였음.

○ 각 연령계층별 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의 각 연령별 인구추계를 이용하였음.

□ 다음으로는 각 연령계층집단별로 학력구성과 농가인구 구성 비율을 전망하였음.

- 농가인구의 비율 전망에 있어서는 이농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 현재 농가인구의 비율은 고령층에서는 높으나 중장년층에서는 그렇지 않으므로 만약 이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점차 고령화하여 소멸함에 따라 농가인구비율은 빠르게 하락함.
- 다음의 <표 7-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5~64세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농가인구비율은 2000년의 21.0%에서 2017년에는 4.3%로 하락함. 고령층의 농가인구비율이 이와 같이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는 현재의 농가인구가 주로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 2017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7-1> 55~64세 인구 중 농가인구비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

	1990	2000	2010	2017
남녀총수	35.7	21.0	8.3	4.3
남 자	38.1	20.0	7.4	3.9
여 자	33.7	21.9	9.2	4.6

주: 2000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 이후는 한진화·최경수·김동석·임경목(2002)의 전망치임.

□ 연령계층별 학력구성의 변화도 농가인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수준은 1980년대부터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연령계층별 학력구성의 차이가 큼.

- 2001년의 경우 연령계층별로 본다면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이상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 25~34세 계층에서 42.2%, 35~44세가 34.3%, 45~54세 19.0%이나 고령층에서는 55~64세 14.9%, 65세 이상 11.1%로 낮음. 여자는 25~34세 36.7%, 35~44세 17.4%, 45~54세 7.3%, 55~64세 3.1%, 65세 이상 1.1%임.
- 학력구조의 전망은 향후 고학력화의 추세는 현재보다 높아지지는 않지만 낮아지지도 않는다고 가정하였음.
- 2002년의 경우 25~29세 연령계층에서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비중은 남자 43.1%, 여자 45.4%임.

- 30세 이상의 계층에서는 현재의 학력구성에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연령만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 연령대 이하의 인구의 학력구성은 향후에도 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기존의 고학력화된 청년층이 중장년층을 구성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함.
- 물론 학력수준이란 교육연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중 대졸이상 학력자는 2002년의 21.2%(남자 25.2%, 여자 17.5%)로부터 2020년 30.0%, 2050년 38.5%로 크게 상승함.
- 아래 <표 7-2>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20대 후반의 청년층 중에서만 대졸이상 학력자의 구성 비율이 40% 이상이지만 이 연령층이 고령층이 되는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약 40%가 대졸이상의 학력을 갖추게 되는 것임.

<표 7-2> 15세 이상 인구 중 대졸이상(초·전문대 포함) 비중

(단위 : %)

	2010	2020	2030	2040	2050
남녀총수	25.4	30.0	33.0	35.6	38.5
남 자	28.5	32.5	35.1	37.7	39.6
여 자	22.3	27.5	30.9	33.6	37.5

주 : 현재의 학력구성을 연장하여 계산.

-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구구조와 인구특성변수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연령계층별 취업률(취업자/인구비율)은 로짓모형에 의하여 실시하였음.
 - 포함된 변수들은 구체적으로 상수항, 고졸더미, 연령, 농가더미, 재학 중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음.
 - 각 변수에 해당하는 계수의 추정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면 남자의 경우 고졸더미는 30~54세 연령층, 대졸더미는 25~29세 연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졌으며 고령층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오히려 음의 값을 가짐.
 - 반면 농가더미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었고, '재학 중' 더미는 일률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
 - 고졸과 대졸더미가 60세 미만 계층에서는 양의 값을 가지지만 60세 이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지는 것은 60세를 전후하여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은퇴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기준집단이 되는 중졸이하와 비교한다면 중졸이하 계층은 중장년기에는 취업률이 고학력집단보다 떨어지지만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60세 이상에서도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에 고졸과 대졸더미는 그 부호가 60세를 전후하여 바뀌는 것으로 보임.
 - 혹은 고령층의 경우 농가의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농가의 저학력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영향도 작용할 것임.
- 여자의 경우에는 농가더미는 40세 계층부터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며 ‘재학 중’ 더미의 음(-)의 유의성은 마찬가지로 있음.
- 그러나 고졸 및 대졸더미의 계수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연령계층에 따라 다른 방향의 값을 나타낸다. 20대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력더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
 - 그러나 30대 이상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며 대졸더미는 30대 후반~40대에서, 고졸더미는 40~50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여자의 교육더미가 그 방향이 바뀌는 것은 세대 간의 차이로 생각됨. 즉, 이전의 세대에서는 여자 고학력자는 임금수준이 기회비용에 미달하고 고용기회도 작았으나 이후의 세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연령계층별 취업률의 전망은 기본적으로 로짓모형의 계수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 미래의 취업률 구조의 변화는 계수 추정치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감안하여 이를 선형으로 연장함으로써 감안하였음.
-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전까지는 취업률 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학력화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 반면 고령화의 취업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주로 농가인구비율 하락의 영향임.
 - 학력변수들은 60세 이상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여자의 경우에는 학력수준에 따른 취업률 상승의 추세가 뚜렷이 확인되기 때문에 고졸 및 대졸더미 변수들은 30~40대 연령층에서 향수 점차 그 방향이 바뀔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학력변수의 로짓 계수 추정치들은 현재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다면 음(-)의

값을 가지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계수들이 점차 증가하여 양(+)의 값을 가질 것이며, 그 결과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취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여성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그 주원인은 남자와 마찬가지로 농가인구비율의 하락임.

□ 이와 같이 전망된 연령계층별 취업률을 이용하여 2017년 이후는 이 비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2050년까지 연장한 결과는 <표 7-3>과 같다. 취업자 증가율은 대략 2020년경을 전후하여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취업자 증가율은 1999~2000년간은 3.5%였으나 2000~10년간은 1.2%, 2010~20년간은 0.1%로 점차 낮아져 2030년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30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인구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이유는 전체인구 중 취업률이 낮은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므로 취업자 감소세에는 인구성장률에 더하여 고령화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임.

<표 7-3> 취업자 수 장기전망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취업자수(천명)		21,156	23,831	24,178	22,812	20,301	17,696
취업자 증가율(%)		3.5	1.2	0.1	-0.6	-1.2	-1.4
연령별 구성비 (%)	15~24	9.0	6.4	7.7	6.5	6.1	6.6
	25~49	65.8	62.1	56.6	52.6	51.5	48.6
	50~64	19.8	25.2	29.3	30.5	29.6	31.3
	65+	5.0	6.3	6.4	10.4	12.8	13.5

□ <표 7-3>의 장기전망에서는 80세 이상은 취업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며 농가 인구비율의 하락에 따라 고령층의 취업률도 현재보다 낮아진다고 가정함.

- 이와 같은 가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5.0%에서 2030년에는 10.4%, 2050년에는 1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만약 5세 연령계층별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비율은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함.
- OECD(2002)에서는 65세 이상 취업자는 2030년 13.4%, 2050년 17.8%까지 상

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표 7-3>은 65세 이상 계층뿐만 아니라 50~64세의 비중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 비중은 2000년의 19.8%에서 2030년 30.5%, 2050년 31.3%로 증가하며, 반면 25~49세는 2000년의 65.8%에서 2030년 52.6%, 2050년 48.6%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론 연금제도의 정착 등 미래의 여건변화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양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영향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구성에 있어서도 중장년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의미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 노동시장의 고학력화도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대중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현재는 고령층 중 고학력자의 비중은 낮음.
- 아래 <표 7-4>를 보면, 2002년 55~64세 남자의 학력구성은 중졸이하가 53.0%, 고졸 31.9%, 대졸이상은 14.1%에 불과하나 현 추세를 연장해 볼 때,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의 구성비는 2020년 32.9%, 2040년 45.6%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표 7-4> 55~64세 중 대졸이상(전문대 포함) 학력자 구성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남녀	8.8	12.4	24.3	37.2	46.1	47.6
남자	15.0	18.3	32.9	42.3	45.6	45.9
여자	2.6	6.7	16.0	32.1	46.6	49.4

주 : 현재의 연령별 학력구성비를 연장한 결과임.

□ 학력구성비의 상승은 고령층 노동시장을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표 7-5>는 2002년 비농가 남자의 취업과 임금근로취업에 대한 학력변수의 영향을 나타낸 것임.
- 분석에서는 로짓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학력변수 외에는 상수항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음.

-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농가 표본 중 45~54세 계층에서는 고졸과 대졸더미가 모두 취업과 임금근로취업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55~64세 계층에서는 고졸더미는 오히려 취업과 임금근로취업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
- 이러한 경향은 고졸더미가 60~64세에서는 취업률과 임금근로취업률을 낮게 하며, 55~59세에서는 임금근로취업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고령층의 고학력화는 고령층의 취업과 임금근로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제시함.
- 이와 더불어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정년제, 연금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커질 것임을 의미하는 것임.

<표 7-5> 고령층의 취업과 임금근로취업에 대한 로짓 추정치
- 비농가, 남자 경우 -

		45~54세	55~64세	55~59세	60~64세
취업률	대졸더미	0.607	0.107	0.330	(-0.074)
	고졸더미	0.517	-0.077	0.067	-0.215
임금근로 취업률	대졸더미	0.461	0.079	0.217	(-0.089)
	고졸더미	0.016	-0.228	-0.208	-0.251

주 : ()안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계수 추정치임. 나머지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2.

3. 고령층의 은퇴양상

- 본절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은퇴양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봄.
 - 선진국들에서는 1970년대 이후 은퇴연령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은퇴의 시기와 그 결정요인, 그 경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
 - 연구의 주안점은 주로 고령층의 은퇴시기를 연장하여 고령층의 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연금지출의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은퇴과정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장지연(2002)은 2001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를 이용하여 노동력생명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을 45세 기준 예상은퇴연령으로 추계했을 때, 남자 63.8세, 여자 58.7세로 추정하였음.
- 추정결과에 의하면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간 은퇴연령의 하락은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하였음.
- 은퇴연령의 상승은 비농가부문에서는 매우 소폭인 데 비하여 농가부문에 크게 상승하였으며,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소폭이나마 상승하였음.
-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자료의 관찰치 부족으로 충분한 분석은 실시하지 못하였음.
 - 한국노동패널(KLIPS) 제4차연도(2001) 자료의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에서는 총대상자 2,684명 중 596명만이 은퇴를 경험하였으며, 그중 남자는 470명, 60대는 259명으로 실제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관찰치수는 많지 않음.
 - 이 자료에서는 은퇴의 정의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즉 ‘은퇴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을 은퇴자로 정의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은퇴는 경제활동으로부터의 은퇴보다는 생애의 주된 직장으로부터의 퇴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음.
 - 분석의 결과에서는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은퇴상태’에 있을, 보다 정확히는 ‘은퇴’라는 변화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 자료는 관찰치의 부족으로 은퇴의 시기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음.

□ 장지연(2002a)은 『경제활동인구조사』(1998. 6~2001. 12)로부터 구축된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은퇴시기보다 은퇴의 경로에 집중하였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임금근로자는 은퇴경로에 있어 비임금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의 단축보다는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으며,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퇴직경로로서 일단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0~01년의 연간자료 비교에서는 55~64세 남성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다음 해의 취업상태는 상용직이 74.6%, 임시일용직이 9.9%, 비임금직이 4.0%, 비경제활동 9.4%로 나타났음.

□ 이철희(2002)는 이와 달리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였음.

- 그의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외국과 달리 지난 20년간 상승한 것은 주로 농가부문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기인하였음을 밝혔음.
- 이는 중장년층의 이농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 농가의 고령인구가 줄어든다면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본고에서는 고령층의 은퇴과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어떠한 추론이 가능한지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

- 본고에서 소개되고 있는 분석은 여러 가지 제약상 심층적 분석의 단계까지 진행되지는 못한 바, 기초적인 분석의 결과만을 제시함.

□ 고령층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1987~2001년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54세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55~64세 계층에서는 1997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으나 1998년 이후 크게 낮아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70세 이상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7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경향은 농가부문에서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비농가부문에서는 이 연령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별로 변하지 않았음.
- 반면 55~64세 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비농가부문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
- 특히,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연령계층은 60~64세 계층으로 1997년까지는 뚜렷이 상승하였으며 반면 1998년 이후의 하락폭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추이는 이 연령계층이 경제활동상태여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은퇴가 주로 일어나는 연령계층이며 노동의 수요와 공급조건의 변화가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함.

□ 그 변화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55~64세 비농가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각 연령별로 나타낸다면 대략적으로 58~63세 정도에서 경제활동참가

율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남.

- 비농가 남자의 경제활동 여부의 결정이 노동시장 여건에 크게 영향 받는 시기는 50대 말에서 60대 초의 연령대임.

□ 여자의 경우에도 경제위기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의 상승 추세는 남자보다 더 뚜렷함.

- 여자의 경우에도 70대 이상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농가부문에서의 상승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비농가 여자 중에서는 그 변화가 거의 없음.
- 그러나 64세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1987~2002년의 기간 동안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며 1998년의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음.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세는 낮은 연령대로 갈수록 더욱 현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성 경제활동 증가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비농가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와 은퇴시기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출생연도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1987~2002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20~50년생의 출생연도집단별 경제활동으로의 이행으로 정의되는 은퇴는 대체로 50대 전반에 시작되어 6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진행됨을 보여줌.
- 1998년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든 출생연도 집단에서 급속히 하락하였다.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이를 보다 자세히 표로 나타낸다면 <표 7-6>과 같음.

- <표 7-6>에서는 비농가 남자 중 1930~42년생의 55~64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를 나타낸 것인데, 1998년에 해당하는 통계를 굵은 글씨로 표현함 (1934년생의 64세, 1935년생의 63세 등).
- 표를 살펴보면 모든 출생연도집단에서 1998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 관찰됨.

- 1998년의 경제 위기는 특히 고령층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가져왔던 것임.
- 표를 세로로 살펴보면 60세 미만에서는 경제활동이 대체로 상승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음.
- 1998년 경제위기의 영향은 별도로 하더라도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난 1942년생의 59세 및 60세(2001년 및 2002년) 경제활동참가율은 이전 출생연도집단보다 높지 않음.
- 1939~ 40년생의 62~63세 경제활동참가율도 60%를 상회하는 1930년대 전반에 출생한 집단보다는 낮음. 표를 가로로 살펴볼 때, 경제활동참가율이 60%미만으로 하락하는 연령도 1931~33년은 63~64세이나 1940년생은 62세임. 이러한 변화는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함.

<표 7-6> 출생연도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비농가, 남자)

연령 출생연도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1930			72.5	69.4	69.6	62.9	57.8	54.4	53.3	55.3
1931		75.6	73.2	72.1	69.1	67.9	65.1	61.1	59.1	52.6
1932	78.0	75.3	75.8	74.5	72.9	68.8	64.8	64.1	63.1	57.2
1933	81.8	81.7	79.6	79.0	74.6	66.4	65.7	63.3	62.2	58.6
1934	85.1	84.8	84.5	82.9	76.0	72.4	71.3	67.3	63.6	51.7
1935	84.9	83.0	80.2	79.1	74.9	75.5	70.6	65.5	58.7	51.2
1936	86.6	86.7	82.2	79.8	78.2	73.3	71.3	56.7	50.9	44.4
1937	85.0	83.8	82.3	78.6	76.9	73.8	63.5	56.7	50.1	51.1
1938	86.5	83.6	81.8	79.4	77.4	63.9	59.1	56.0	51.3	50.7
1939	85.9	83.4	80.0	76.2	70.1	64.8	58.1	54.5	55.0	
1940	85.4	80.7	84.0	77.9	70.8	65.3	63.9	59.6		
1941	87.8	86.6	82.1	79.4	70.1	66.7	64.1			
1942	88.2	80.8	78.1	72.0	68.1	66.8				

- 고령층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복잡한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이 보다 더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후에 강조하는 바와 같이 패널자료 등 보다 나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기존의 횡단면 자료로부터 대략적인 설명을 시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음.
- 55~64세의 비농가 남자 고령층의 장기적인 경제활동 증가추세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고령층의 고학력화와 임금근로자 비율의 증가를 들 수 있음.

- 비농가 남자의 학력구성은 지속적으로 고학력화되고 있음.
- 고령층 가운데에서는 대졸이상 학력자의 구성비가 크지 않지만 중졸이하와 고졸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학력구성의 꾸준한 상승이 관찰됨.
- 대졸이상 학력의 구성비가 1998년에 크게 상승한 것은 경제위기시의 대량실직이 저학력·저임금 근로자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 취업자가 아닌 전체 인구의 학력별 구성비 변화를 살펴본다면 1998년의 변화는 이만큼 현격하지는 않음.
- 학력구성비의 변화는 55~59세, 60~64세 계층에서 모두 비슷한 정도로 나타남.

□ 이러한 학력수준의 상승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가져옴.

- 고졸이상과 중졸이하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양상을 비교해보면 고학력자는 저학력자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수준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령층에서도 마찬가지임.
- 그러나 60대 이상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령층의 학력수준 상승은 앞서 확인한 1997년 이전까지의 그리고 최근 다시 진행되는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됨.
-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다른 요인으로는 임금근로자의 증가가 있음

□ 고령층의 임금근로취업률은 연령의 상승에 따라 비임금근로취업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하락함.

- 보다 넓은 연령대에서 두 취업률의 변화를 비교하면 두 경우 모두 대략적으로 50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지만 비임금근로의 경우는 그 하락이 완만하며 임금근로취업률 하락은 보다 급속하다.
-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년연령은 노동부의 300인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2001년)에 의하면 평균이 56.6세(근로자수 기준, 기업수 기준으로는 56.7세) 중간값이 56.0세(근로자수 및 기업수 기준)이며 가장 일반적인 정년연령은 55세(기업의 46.4%, 근로자의 45.5%)이며, 경총의 표본조사(1998년)에서도 평균정년연령은 55.2세로서 55세 정년이 전체기업의 88.3%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규모는 약 163만명 정도(2002

년)로서 전체 취업자의 7.4%, 임금근로자의 11.5%에 지나지 않음.

□ 다음으로는 고령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봄.

- 취업자 구성의 변화는 고령층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1987~2002년간의 변화가 역U자형을 가지는 이유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
- 55~59세, 60~64세 연령계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성의 변화추이를 보면 연령계층별로 상용직과 자영업은 서로 반대로 움직임.
- 1990년대 중반 상용직의 비중이 높을 때에는 자영업 비중은 낮았으며 1990년대 초와 1998년 이후에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변화의 정도는 자영업이 보다 완만함.
- 이러한 특징은 상용직과 자영업의 이동 가능성, 즉 상용직으로부터 퇴직한 고령층 근로자의 자영업 취업 가능성을 제시함.
- 그 변화의 폭은 상용직이 더욱 크므로 상용직에서 퇴직한 모든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취업하는 것은 아니라는 추론도 가능함.
- 다만 60~64세에서는 상용직의 하락과 더불어 임시직 구성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고령층의 상용직 퇴직 후 임시직 재취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그들의 종사상의 지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횡단면 자료로부터는 명확하지 않음.

□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양상은 상용직 구성비와 거의 정확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음.

- 55~59세에서는 상용직 구성비와 동시에 경제활동참가율이 완만한 역 U자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60~64세 계층에서는 같은 형태로 변화하였으나 그 변화가 보다 급속하였음.
- 상용직 구성비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상용직 퇴직자의 상당한 부분이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한 경과일 것임.
- 장지연(2002a)의 연구에서도 상용직은 퇴직 후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경제 위기 이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것은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은 상용직에서의 퇴직 혹은 취업감소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고령층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지적되는 다른 한 가지의 현상은 연령-임금 곡선이 40대 중반에서 정점에 달하며 그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한다는 사실임.
 - 우리나라 연령-임금곡선의 이러한 뚜렷한 특징은 임금수준이 50대에 정점에 달하며 이후의 하락속도도 완만한 선진국들의 연령-임금곡선과는 크게 대비됨.
 -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불안정성을 시사하는 자료로 흔히 인용되며, OECD(2002)도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음.
 - 연령-임금곡선이 40대 말부터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40대 이후에는 고임금근로자부터 직장에서 퇴직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구성의 변화에 의하여 연령-임금곡선이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는 것임.

- 고령층의 고용불안정성이란 직장에서부터 퇴직 혹은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패널자료에 의한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한 그 경향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고령층의 임금근로취업률은 50대 후반부터 하락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만약 고령층이 임금근로형태로 어떤 직장이든지 취업하고 있다면 그들의 취업은 임금통계에서 포착되고 있어야 할 것임.

- 그렇다면 왜 임금통계에서는 임금수준이 40대부터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2000년의 우리나라의 연령-시간당 임금곡선을 보면 우리나라의 연령-임금곡선의 정점은 40대 중반이며 고졸이하의 정점은 이보다 오히려 더욱 이름.
 - 반면 대졸이상은 정점이 50대 전반이며 이후의 평균임금은 완만하게 하락하나 연령-임금곡선을 출생연도별 시간당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그려보면 연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하락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 출생집단별 인구집단과 각년도 인구집단의 중요한 차이는 전자에서는 학력구성이 변하지 않으며 경력변화도 연속적이거나 후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임.
 - 실제로 이후 출생세대일수록 높은 실질임금수준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줌.
 - 40대 이후 평균임금수준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수준이 매우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학력구성이 고 연령대에서 낮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 학력구성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들은 경력 및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도 한 요인일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연령-임금곡선이 40대부터 급속하게 하락하는 것은 근로자 구성변화의 영향이 강하며, 장기적으로는 학력구성 변화가 완만해짐에 따라 정점의 상향이동도 예상할 수 있음.